

보도시점 2025. 3. 27.(목) 12:00
(2025. 3. 27.(목) 석간)

배포 2025. 3. 26.(수) 19:30

개인정보위, 「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」 발표

- 의무대상 조정(매출액 1,500억 원·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) 및 자발적 가입 유도
- 보험료(약 50% 인하)·보장범위 개선 및 기업·국민 대상 인지도 지속 제고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3월 26일(수) 제7회 전체회의에서 「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.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·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.

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·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하였다. 그러나 ①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·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, ②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, ③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·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▲ 합리적 제도 정비, ▲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, ▲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
목표	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로 피해구제 기반 마련		
개선 방향	합리적 제도 정비 및 집중 관리	보험료·보장범위 등 개선 정확한 정보제공	기업 및 국민 대상 인지도 제고 지속

먼저, 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)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(매출액 10억 원 이상·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→1,500억 원·100만 명)하고 집중 관리한다.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. 또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활성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두 번째로,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통해 **보험료(율) 인하**(’25년부터 약 50% 인하), **보험 보장범위 확대** 등 **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**해 나갈 방침이다. 구체적으로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. 또한 과징금 보험특약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. 지금은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특약으로 과징금을 보장하고 있다.

마지막으로, **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분쟁조정 손해배상금(합의금)도 보장**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.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. 아울러,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) 협의회, 유관 협단체 등과 의견수렴,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	책임자	과 장	이정아 (02-2100-3141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우 (02-2100-3142)

